

국내 첫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법원 판결과 전망

“北, 영변 원자로 중단”

아사히 보도 “IAEA사찰팀 재입국 허용”

‘원고 입증책임’ 수용 여부 항소심 관건

“폐암 원인 다양해 특정 개인에 적용 못해”

1심만 7년 걸려 대법까지 ‘장기소송’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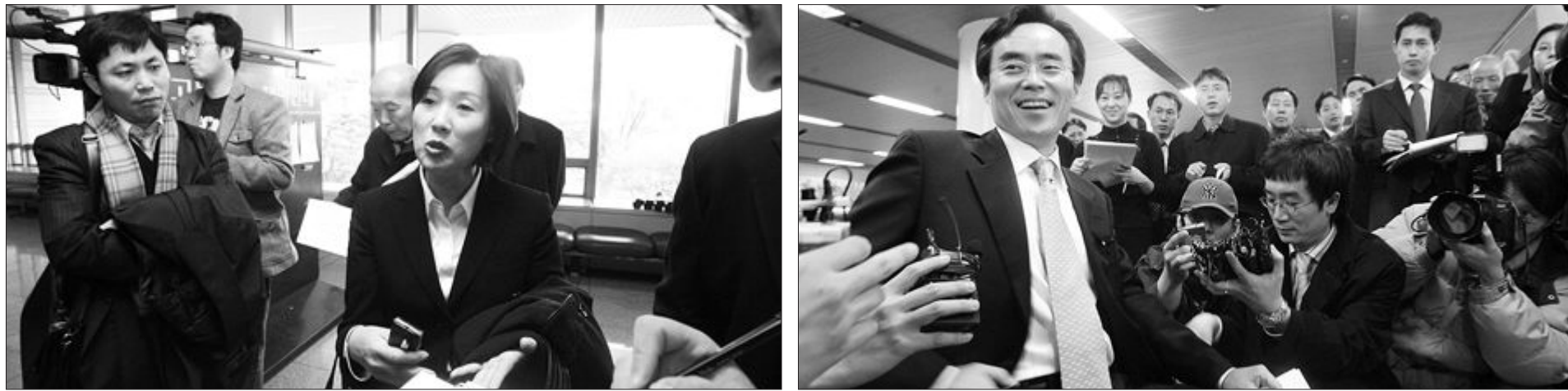
7년여를 끈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과 폐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가 고심 끝에 판결을 내렸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흡연·폐암 인과관계> 판단은 항소심으로=1심 패소 판결로 ‘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련, 단순히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가정한 채 통계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예를 들어 원고들이 살아온 생활방식, 흡신지나 생활지역, 병력

등 구체적인 변수가 같다고 가정할 때 흡연과 폐암이 인과관계가 있는냐고 본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엄격한 증거조사와 법 적용을 통해 판단했을 때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직접 유발됐다는 주장 등 원고들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의학적 판단 등 추가 증거가 제시될 경우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은 있다. 1심 결론이 나오는 데만 7년여의 오랜 기간이 걸린 점에 비해 불태 담배소송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내 첫 담배소송은 ‘장기 소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입증책임 어디에 있나> 양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오랜 기간 흡연하면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는지 등 중독성 여부, KT&G측이 경고 문구 삽입 등을 통해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고지(告知)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제조물책임(PL) 적용 여부 등의 주요 쟁점을 놓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담배소송’ 쟁점별 판결

Table with 4 columns: 쟁점, 원고, 재판부, 피고. Rows include 인과관계, 중독성, 불법행위.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원칙이다.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쪽(원고)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의료소송·공해소송 등의 경우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료진이나 거대 기업 등을 상대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이 어려운 환경영역 피해를 입증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번 담배소송에서도 양측은 입증 책임을 놓고 논박을 벌였다. 원고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등을 의료소송·공해소송 등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입증 책임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구체적인 입증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연남뉴스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 소송’에서 25일 패소한 원고측 배급자 변호사가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 왼쪽) 반면 피고인 KT&G측 변호사는 담배를 즐기느냐는 질문에 “담배를 핀다”고 답하며 웃음을 짓고 있다. /연남뉴스

사찰팀의 재입국 및 감시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핵관련 프로그램의 신고는 거부하겠다는 뜻도 아울러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말 6차회담에서 핵 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 조치’로서 핵관련시설의 가동중단을 비롯 IAEA에 의한 사찰, 핵실험장의 폐쇄, 핵관련 프로그램의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당사국인(唐家璇) 중국 국무위원은 25일 ‘설’(2월18일) 전에 6차 회담을 갖는 것이 우리 기본 구상이며 회담이 길어지면 설 기간에도 쉬지 않고 회담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탕 위원은 이날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송민순 외교교통상 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 송 장관의 중국 방문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연남뉴스

미국에 입국해 최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 중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제9차 한·미 사중위킴그룹 회의를 열고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또 VWP 가입을 위해 지난 9월 현재 3.5%선인 비자거부율을 내년 9월까지 3% 미만으로 낮추고, 내년 말까지는 전자여권 발급을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출입국 관리 협의, 대테러 공동 대응, 공항내 보안 체계 협조, 분실여권 관리 공조 등 안보·사법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완화조치는 연방의회가 규정한 VWP 가입의 핵심 전제 조건인 3% 미만 비자 거부율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디지털 위조방지 여권 도입, 도난·분실 여권 통제 VWP 적용 대상국을 더 늘리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해당 국가 국민들이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인 무비자 美 방문 허용시기 앞당길 가능성”

美 비자면제 수혜국 확대안 상정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수혜국 수를 확대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상하원에 각각 상정됨으로써 한국인들이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하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24일 대두됐다.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VWP의 비자거부율 3% 미만 조건과 관련, 여타 조건들이 충족되면 융통성을 부여키로 방침을 정해 미 의회에서 법 개정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우리나라의 VWP 가입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조지 보이노비치(오하이오), 리처드 루거(인디애나), 테드 스티벤스(알래스카), 민주당의 대니얼 아카카(하와이), 바버라 무일스키(메릴랜드) 등 의원 5명은 전날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적용 대상국을 더 늘리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해당 국가 국민들이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비자 없이

美선 흡연자 간혹 승소, 日·佛선 ‘흡연자 책임’

외국 소송 사례는

흡연이 폐암 발병의 원인인지 여부를 둘러싼 흡연자와 담배 회사간 법정 공방은 1950년대 미국에서 첫 소송이 제기된 이래 유럽 각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계속돼 왔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간혹 있었던 반면,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 국가에선 흡연자의 책임에 무게를 두고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흡연자 간혹 승소>=미국에선

수십 년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의 유족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사례마다 법원의 판단이 다르지만 법원이 흡연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어서 이번 소송을 이끈 우리나라 흡연자측 변호인도 이같은 추세에 기대를 걸었다. 200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40년간 담배를 하루 두갑씩 피우다 폐암에 걸린 리처드 보켄에게 5천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선고가 나기 전 재판부가 중재해 양측이 합의한 경우도 많다. 1998년 미국 46개 주정부가

“흡연으로 관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져 복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며 주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5년에 걸쳐 2천460억달러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프랑스 ‘흡연자 책임’>=일본 최고재판소는 작년 2월 폐암 환자 6명이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면 일본 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6천만엔의 손해소 상고심에서 담배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독일과 프랑스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남뉴스

‘담배소송’ 재판 일지

- 1999년 9월=폐암 말기 환자 5명, 서울지법에 소송 제기(최재현 변호사)
1999년 10월=담배소송 첫 심리
1999년 12월=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 소송 제기(배급자 변호사)
2004년 5월="KT&G 관련 연구문서 464건 공개" 판결
2004년 11월=원고 "재판부가 왜곡된 감정서 요약본 언론에 배포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및 대법원에 징계 요구
2004년 11월=서울대 의대 감정단,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서 제출
2005년 4월=원고 측 신청으로 조정 회부
2005년 6월=조정 시도했으나 KT&G 반대로 결렬
2006년 12월=변론 종결
2007년 1월=한차례 연기 뒤 선고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공시 최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최형표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시험: 4월 14일(접수기간 1/19~1/23), 광주시, 전남도, 서울시, 경기도 시험대비
7·9급 일반행정직 사회복지직
9급 교정직 소방직
7·9급 교육행정직 공인중개사
광주 메가고시학원
http://www.gmegaco.kr

전액무료 국비훈련생 모집
모집기간: 2007년 1월 16일부터(30명 정원 한도내 선착순 모집)
취득자격: 정보통신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모집대상: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02대학교(빙동대 포함)·02대학교(한신·시립)대학에 재학중인 실업자
-취업보호대상자
-비전환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장애인
-일반주부(3개월전에 구직등록한 주부)
-수강료 전액 무료
-교재 무료 제공
-교통비 지급(매월 50,000원 ~ 6개월 총 300,000원)
-우선선정직종수당 지급(매월 200,000원 ~ 6개월 총 1,200,000원)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취업률 100% 취업
학교교무실 상담 및 방문(건강보험카드 지참)
224-4580, 224-4580
전액무료
본선37, 지원54, 지원54, 금58, 두일81, 518
문원(구도청)
전원07, 지원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지원55, 금56, 금57, 금58, 금59, 59, 59, 61, 1187
예술의거리 입구
지원07, 금56, 대촌70, 대촌70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224-4560, 224-4580
www.hdedu.co.kr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개강 2월 1일
2007년 4월 14일 국가직 시험 3000여명 모집
행정직 세무공무원 교육행정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www.kjkimyoung.co.kr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성공신화는 계속된다
2008년 현업시험 대비반 개강(기초과정) = 개강: 2월 1일 =
김윤신 초등교육과장 개강 2월 1일(목)
의치의학, 현직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2월 1일
김영대학면임학원 동부경찰서 227-8088